잃어버린 청춘, 누가 보상?

편지 빌미 안기부조사후 정신분열증세

19번의 고달픈 입원 이후 치료책 막연

12년째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의 치료를 위해 안기부 인천분실(일명 인하공사)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애끓는 모정의 몸부림이 지금 인천 지역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편지 사건

사건의 발단은 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헌공업전문대 2학년에 재학중이던 최영미씨가 당해년도 6월10일 상오 7시 경 확실한 신분도 밝혀지지 않은 3인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끌려가면서 시작된다.

당일 하오 7시경이 되서야 전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최영미씨를 찾아간 곳은 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국가안전 기획부 인천분실이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당시 최영미씨는 창백한 얼굴에 몹시 시달린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 평소 명랑하던 최씨의 행동이 말수가 적어지는 등 조금씩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영미씨는 이 사건 직후 가족들에게 "그곳에서(안기부를 말함) 집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조사받은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하실에서 심한 심문을 받았는데 자신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고 말하고서는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는 날이 갈수록 정신 상태가 혼미해져 갔고 그 해 1월에는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문을 안으로 잠그는 등의 행동까지 했다. 이같은 최씨의 이상한 행동은 82년 4월18일에도 이어졌다.

새벽 3시반경 어머니 전진숙씨를 깨워 안기부 인천분실까지 데리고 가서는 숙직을 서고 있던 직원에게 "전

경에는 자택 화장실에서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고 면도날로 왼쪽 손목을 찢으면서 자해를 가하다 가족들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세'로 판정을 받은 최영미씨는 이때부터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힘겨운 병간호도 뒤따랐다.

아버지의 죽음

안기부라는 권력 기관의 서슬 퍼런 입김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던 5공화국 하에서 최영미씨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지 자비로 최씨의 병치료에만 전력하는 길 뿐이었다.

그러나 입원비만도 만만치 않아 최영미씨는 87년까지 무려 17번이나 인천기독병원 용인정신병원 서울국립정신병원을 오가며 약물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급기야 85년 8월 최씨의 부친 최운직씨는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탄원을 하게 됐고 86년 2월경 안기부 감찰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방문해 조서를 받아 가면서 "곧 청와대 회신이 있을 것이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자 그 해 6월 울화병까지 겹쳐 59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후 최영미씨의 모친 전진숙씨는 6·29선언 직후인 87년 7월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그러자 정치

족들은 치료비를 일체 지불한 적도 없었다. 91년 10월경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받아 평생의료보호증까지 받았다.

그러던 중 92년 12월28일 이 진료증이 동사무소에 반려됐다. 당시 최씨 가족을 찾아 온 동사무소 직원은 "감사에 적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다시 안기부 인천분실로 찾아 갔다. 성씨밖에 모르는 '박선생'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키가 작고 비교적 뚱뚱한 체구의 남자가 나와서 "그정도 해줬으면 된 것 아니냐"면서 냉냉한 반응만을 보였다고 한다.

안기부의 특혜(?)

결국 최씨 가족들은 발걸음을 돌렸고 최영미씨는 현재 집에서 모친이 타다 주는 약을 복용하는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다. 다행히 병세가 많이 호전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번에 걸친 자해 소동까지 겪었던 가족들로서는 앞으로의 치료가 막막한 실정이다. 게다가 재판을 제기하고 싶어도 시효기간이 소멸된 관계로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실정이다.

최영미씨를 서울대학병원과 용인정신병원에서 치료했던 담당의사 김철웅씨는 "초기에는 피해 망상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이후 애정 망상증까지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신분열증세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안 초조 증상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안기부는 최영미씨 사건은 인지하고 있으나 안기부가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부 한 관계자는 "최영미씨 문제가 공식적으로 서류 접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87년부터 92년까지의 최영미씨 입원치료에 안기부가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시대의 암울함이 빚어낸 최영미씨 사건은 법적 시효도 소멸된 채 이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여고시절 수학여행에서의 즐거운 한때(우측이 최영미씨).

최영미씨 사건의 책임은

특혜성 치료과정에 관련기관 '오리발'

최영미씨 사건의 발단이 된 81년도 '편지사건'의 전모 그리고 87년부터 92년까지의 치료과정을 둘러싼 진상은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편지와 책임자는

가족들은 안기부측에 그동안 문제의 '편지'를 공개할 것과 무슨 혐의로 최영미씨를 수사하게 되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사건이 일어난 81년 당시 최씨의 부친 최운직씨가 주변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애기 뿐이었다. 더우기 당시 최영미씨를 담당한 안기부 수사관들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과연 최영미씨가 정신분열 증세의를 보이게 된 직접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분명하게 단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가족들은 최영미씨의 행동에 이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과 병원입원시 행동 등을 근거로 안기부 측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은 특히 "안기부에

수 있게끔 안기부가 주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기부 한 관계자는 사건임을 전제하면서 "그같은 일에 안기부가 일체 나선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87년부터 최영미씨가 치료 받아본 과정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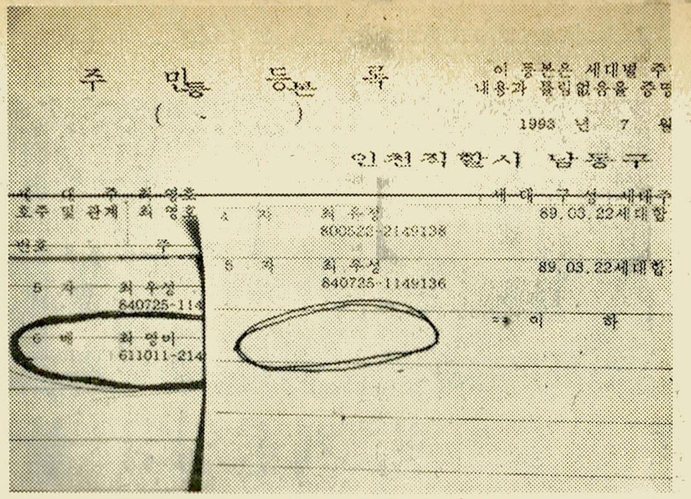
보호 1호

최영미씨의 어머니 전진숙(60)씨에 따르면 영미씨는 용인에 87년 9월부터 88년 5월까지 입원했었고 92년 10월까지는 인천신경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91년 10월 경에는 안기부의 주선으로 동사무소로부터 '거택보호 대상자' 지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가족들은 전혀 치료비를 부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족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차로 용인정신병원 원무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병원측은 "86년에 두차례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87년 이후로는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영미씨는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이에 대해 가족들은 "당시 용인정신병원에 면회차 수차례 다녀왔다"고 밝히며 금년 4월24일자로 발급된 입원확인서까지 제시하고 있다. 가족들이 제시한 입원 확인서에는 '최영미씨가 87년 9월 18일부터 88년 5월10일까지 입원 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결국 용인정신병원측은 외부압력이나 모종의 이유로 최영미씨의 입원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



관련기관에 의해 임의로 분리된 주민등록등본.

(현재는 명심원으로 개칭됨) 원장 장순분씨 이름만이 기타란에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려병 환자나 거택보호 대상자만이 해당되는 '보호 1호' 대상자로 최영미씨는 분류돼 치료비 일체가 국고로부터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거택보호 대상자

최영미씨의 경우 분명 보호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행려 병자로 분류될 수는 없기에 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과연 '거택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실제로 최영미씨는 '거택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최영미씨는 행정 서류상 91년 10월부터 92년 12월까지만 '거택 보호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를 위해 1년2개월 동안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없이 편법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기까지 한 것이다.

결국 최영미씨는 91년 10월 이전까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고 91년 10월이후부터도 편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월2동 동사무소 담당 직원 김모씨는 "외부 압력은 없었으며 업

와 구청에 각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운영돼 있는 가운데 등본까지 임의로 분리해가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처리하는 일을 말단 동직원인 김씨 혼자 처리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지자 인천시청 사회과 복지계에서는 "최영미씨의 편법 거택보호 대상자 처리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고 밝히다 다음날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책"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이는 애궂은 일선 말단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시청 관계자들로부터 받기까지 하고 있다.

해결의 열쇠는

이번 최영미씨 사건의 열쇠는 진상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치료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 말단 공무원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그러나 최씨 사건의 핵심자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과거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